

# 업무계획

## 글로벌 스탠더드 기반 확충

기술표준정책과  
02-509-7220~3

### 1. 2009년 정책목표

### 2. 2009년 중점 추진과제



#### 1. 안전 코리아 전략

##### 사전 예방적 제품안전관리 기반구축

안전관리 대상 외 제품도 안전성조사 및 행정조치기 가능하도록 하는 등 예방적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「제품안전기본법」 제정.

선제적인 중·장기 제품안전정책 추진을 위해 「제품안전 5개년 종합 계획」 수립.

- ▶ 제품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, 규제와의 합리화,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등

FTA 확산에 따른 다양한 위해 제품의 수입 전 차단을 위해 국가간 「위해정보 사전통보 시스템」 구축.

- ▶ 중국, 동남아산 저가 위해제품의 유통차단을 위해 OECD, APEC과 협력체계 구축

불법·불량 제품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(행정조치)을 위한 제도마련

시판품 조사결과 의 언론공표 및 제품리콜 등 행정조치 강화

\* 불법·불량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, 수거, 파기 및 언론공표로 시장에서 퇴출 유도

불량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고 시·도의 행정조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조치결과 의무 통보 추진

\* 「전기제품 안전관리법」 및 「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」 등에 근거 마련

### 소비자가 공감하는 수준으로 제품안전관리 대폭 강화

불법·불량 제품에 대한 신속한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 정도별(3단계) 소비자 정보발령 시스템 구축



유아용품 등 사고발생 시 위해우려가 큰 제품의 경우 사업자가 소비자 등에 위해정보를 의무 통보토록 근거 마련

\* 제조·수입·유통업자가 제품의 안전위해 및 사고정보를 보고(미신고시 가중 처벌)

소비자의 접근성이 용이하나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한 홈쇼핑, 인터넷 쇼핑몰 등에 대한 안전 감시활동 강화

\* 사이버 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선담 제품 안전 감시난을 배지

###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(생활공감 정책)

소비자 불만 신고품목, 정기검사 불합격 제품 등 안전취약 품목에 대한 안전성 조사 확대 등 집중 관리

\* '08년 조사결과 취약품목 : 어린이용 장신구, 합성수지 유아용품, 유모차, 완구

\* 안전성조사 확대 : ('08) 84품목, 1,003건 · ('09) 100품목, 3,000건



저가 수입제품, 불법·불량제품의 유통근절을 위한 단계별 어린이제품 안전망 가동

불법·불량 어린이용품의 수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「세관장 확인 물품」 확대

\* 어린이용품 : ('08) 18개 품목 → ('09) 23개 품목 · ('10) 28개 품목

### 기업이 스스로 안전관리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조성

인간 자율관리 대상품목을 확대하여 기업에게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고, 시장이 감시하는 안전관리 체제로 전환

\* 전기용품·공산품 : 안전인증 → 자율안전확인 → 공급자적합성확인(SDoC)

강제인증 대상인 신제품이 인증기준이 없어 인허가가 지연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'(가칭) 강제인증 예비제도' 추진

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을 배양하고 세계수준의 안전명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애로기술 개발 지원

\* 안전설계·제조 기술, 중소기업 공동 브랜드·디자인 개발 R&D 지원



- 동일 사고 재발방지 등을 위한 '제품안전 기술보 고서' 제작·배포(분기별)

### 안전관리 우수기업은 보호하고, 불량기업은 퇴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

업체별 안전관리 수준에 따라 공장심사 및 정기 검사를 차별화하는「안전등급제」도입, 운영

‘기업의 안전관리 실태에 따라 우수기업, 준우수기 업, 불량기업으로 구분

자발적 리콜 실시 등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대한 정기검사 면제, 포상 우대 등「인센티브 프로그램」개발·운영

인증이 취소된 제품의 모델을 변경하여 재인증을 받는 병폐 등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불량기 업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

#### ※ 불량률 30% 이상 품목

- 전기용품 : 전기장판, 전기매트, 전자식 안정기, 형 광등기구 등
- 공산품 : 비비탄총, 어린이용 장신구, 유모차, 합성 수지 유아용품 등

- 불법·불량 제품을 삼습적으로 제조·판매하거 불량률이 높은 기업은 별도 블랙리스트로 관리 하고 인증기관과 정보 공유를 통하여 정밀 심사 실시
- 불량 기업의 제품에 대해서는 특별 사후관리 및 안전성 조사 등 집중관리

불법·불량 제품의 유통방지를 위해 시장감 시를 강화하고 모범판매 업소의 확대를 유도

계절상품은 시장에 유통되기 전에 안전성 조사 를 실시하여, 조사결과를 성수기 이전에 발표

‘ 조사결과 발표 : 여름제품(6월말), 겨울제품(11월 말), 장난감(4월말, 12월초)

소비자·생산자 상생협력을 위한 제품안전 사 용이행 대상을 대형마트, 사이버쇼핑몰 등 유통·판매업체로 확대

- 문구·완구점을 대상으로「안전제품 판매 모범업 소」를 선정하고, 타 분야 유통·판매업체로 확대
- 학부모, 교사 등을 대상으로 모범업소 홍보물 배포

분야별 제품안전 지침서를 개발하고 안전기준 기술지도 실시

- 분기마다 품목별 협의체를 대상으로 간담회 등 실 명회 개최
- 재해유발 가능제품(전기장판 등)과 취약부품(온도 조절기 등)에 대한 신뢰성 향상 및 고장진단 등의 관련기술 연구개발 사업 병행

### 산업수요를 반영한 계량 및 제품인증 제도 운영

법정계량단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관련 부처의 법령·제도정비를 추진(3월)

- 국무회의 안전 상정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, 국토 해양부,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과 지자체 조례 등의 정비 협력을 요청

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실량표시상품 적합성 사업자를 확대하고 지자체에 관리지침을 제 정·보급

## 2. 국가표준체계 정착

### 국가표준정책의 총괄 조정기능 강화

국가표준기본계획의 실천, 기술기준의 코드화 등 국가표준정책을 총괄 조정하기 위해 국가표 준 실무위원회등 구성·운영(3월)

- 기표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'국가표준 실무위원 회'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정기적 회의를 통해 합 의를 도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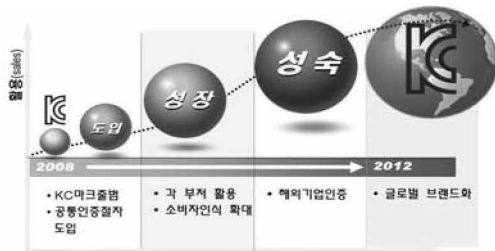


## 국가 인증제도 혁신의 지속과 통합인증마크 제도의 조기 정착

강제인증제도 간 중복인증품목에 대해 인증질차, 시험성적서 공유 등 통합 고시안 마련(6월) 및 전략적 홍보 추진

- 지경부, 환경부, 국토해양부 등 9개 부처 659개 품목 대상
- 단계별 홍보 : (1단계, '09) 도입준비 및 조기정착  
· (2단계, '10) 인지도 제고 · (3단계, '11~) 글로벌 브랜드화

임의인증 품목별 중복시험 및 심사항목 등을 조사하여 동일 평가항목 간의 상호인정협약 체결을 유도(연중)



( 국가통합인증마크의 조기 정착 시나리오 )

## 기술기준의 글로벌 스탠더드화를 통해 규제 완화

기존 기술기준은 국제기준과의 비교를 통해 과도하게 높은 기준과 불필요한 규제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규제위에 상정·조정

· 기준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, 국가표준심의회에 상정하여 관계부처에 조정을 요청

각 부처에서 기술기준 제정시 국제·국가표준과의 부합성, 국제개선 등에 대해 국가표준실부(위)의 사전심사를 받도록 법령 개정(12월)

국민생활 공감 표준화 정책 추진을 범부처로 확대

1차 여론조사('08.10)에서 발굴한 과제를 각 표준 담당과 및 해당부처에서 추진하고 범부처기 참여하는 2차 여론조사 실시(2월)

- 의료기기의 교정·표준화 등과 같은 기술기준 관련된 사항은 규제(위)에 상정하여 신속조치
- 장기적 협력이나 결의가 필요한 사항은 국가표준 심의회를 통해 세부 표준화를 추진

## 녹색성장기술의 국가표준화(KS)를 위한 '그린 스탠더드 전략' 추진

기후변화, 에너지, 자원순환분야의 표준화 경제성 분석을 통해 편익이 월등한 품목을 선정하고 국가표준으로 우선 제정(12월)

- 그린 스탠더드 신문 FM 선발 및 표준개발협력기관(COSD)지정(6월)

## KS제품의 고품질화를 위한 '슈퍼 KS' 도입 검토와 ISO 인증의 신뢰성 제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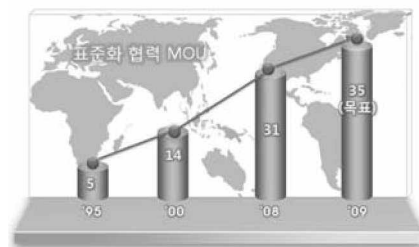
고효율·고성능의 우수 KS제품에 대해 차별화 방안마련(용역 수행 중)

- 869개 KS 품목대상 소비자여론조사 실시
- 우수인증단체에 대한 인정을 통해 단체표준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국제표준과의 비교를 통해 품질 상향조정 방안 검토 등(4월)

ISO 9001(인증업체 3,6만개)과 14001(1만개)의 운영요령 통합으로 인증 현황 보고체계를 개선하고 인증심사원 정보DB모장으로 처벌강화

## 3. 국제표준 지배력 강화

( 연도별 표준화 협력 MOU )



( 국제표준 제안수 증가 추이 )



### 국제표준화기구(ISO/IEC) 정책위원회 상임이사국 진출 검토

IEC CB 및 SMB 임원 취임('08.11)을 계기로, IT 강국 등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상임이사국 진출을 본격 검토 (분담금 상향 조정 등 필요)

- '09년 ISO/Council(기표원집) 및 IEC/CAB(백수현) 선거에 재진출 노력

### 기술위 참여 · 임원 진출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익 강화

- 선진국의 표준화동향 분석을 통한 핵심 산업분야 예측 및 아국의 산업별 중요도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른 지원

### 녹색성장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표준외교 전개

녹색성장 관련 국제 표준화 회의 유치를 통한 표준외교를 전개하여 국제 의장간사 수입, 기술반영 등을 주도

- 안전성표준이 핵심인 수소에너지기술(ISO TC 197, 10월), 연료전지기술(ISO TC 105, 6월) 해양에너지기술(ISO TC 114, 5월) 국제표준화 회의 국내 개최 확정

### 개발기술의 실용화를 위한「R&D-특허-표준」의 연계 지원 강화

반도체 · 디스플레이, 전력IT 등 주요 전략산업

의 R&D와 표준화를 동시에 추진하여 시장 선점을 위한 기반 조성

- 14대 원천기술개발사업 중 분야에 표준 PMO를 구축(4월)하고 R&D사업의 추석평가 모델,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개발(12월)
- 장비 · 부품 · 소재의 국산화로 기술경쟁력이 확보된 전략품목은 국제표준화 추진(11월)
- 전력IT 연구개발과 연계된 표준화 로드맵 이행 전략 수립(8월)

「표준특허 정책협의회」를 구성, 표준특허 창출을 위한 제도 개선, 표준특허 전문가 양성, 표준특허 포탈 구축 등 활성화 기반 확립

- 특허청, 기표원 중심의 정책협의회에 민간이 참여하는 표준특허지원센터(실무기관)를 설립

### 민간 표준 역량 강화로 사실상 표준에 대응

국가표준개발의 단계별 민간이양 계획에 따라 신규 표준개발협력기관(COSID)을 확대 지정

-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 : ('08) 14개 → ('09) 21개 (7개 신규 지정)
- 사실상표준대응기관 확대 : 전담기관(9→12개), 위원회(26→30개), 거점기관(0→9개)

지정기관은 ASTM, IEEE 등 해외 선진 단체 표준 도입 업무를 전담하고 정부는 국제표준 중장기 전략을 수립(6월)하여 지원

- 표준개발협력기관이 해외 단체 표준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(10월)

### 글로벌 표준화 인재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· 지원

표준분야 한류(韓流) 네트워크 기반조성을 위한 아시아 지역의 전문가 양성

- ISO 중앙사무국과 ISO 아시아 Help Desk 운영 및 전담인력 교육 추진



- 미국(ANSI 2명, NIST 1명, ASTM 1명) 파견 외에 유럽(CENELEC), 캐나다, 호주 등에 단기 연수인력 파견 및 국제 표준전문기 양성을 위한 영 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속

## 4. 해외 기술규제 대응

### TBT 중앙사무국의 기능과 역할 강화

중앙사무국의 제도적 지위 확보를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관계부처 간 협의체 구성하여 부처간 협력을 강화

- 법적근거 확보 후 '중앙사무국 운영지침'을 고시(6월)하고 협의체에는 국무조정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
- TBT포탈을 정부차원의 기술규제 통합관리사이트로 격상, 부처간 온라인업무 기능 강화

### 자유무역협정상의 기술장벽(FTA/TBT) 대응 등 양자협력 강화

긴급 현안 해결을 위한 상대국 정부와의 연락체계 확보하고 TBT 위원회의 정기적 개최를 통해 양국간 기술규제 완화, 경제협력 협의

- 미국(어린이용품, CPSC), 사우디(적합성제도, SASO), 중국(정보보안, CNCA)의 담당부서와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하고 아세안과는 기술표준 협력강화를 위한 경제협력 사업 추진(9월)

### 사전 예방적 TBT 대응 민관 네트워크 구축

기술규제의 시급성, 파급영향 등을 파악하는 사전별 T/F팀을 구성하고, 중소기업지원율 위한 '현장밀착형 기술규제 일괄 지원체제'를 가동

- 통보문, 기술규제 분석에 부처 규제담당자의 참여를 확대(12명 → 25명)하고, 통보문 전달 및 업계 의견 피드백을 위한 연락기관을 지정(65개기관)
- 4대 교역국(북미, EU, 중국, 일본)의 기술규제정책 및 주요기술규제 분석 등을 위한 규제제도 실무(위)를 신설하고 특정 규제별 '다음 로드맵'을 작성

### 기술장벽 극복을 위한 시험인증기관 경쟁력 강화

9개 시험기관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하여 글로벌 브랜드화 추진

- 이행준비단계('09~'10년) : 해외공동투자, 공동브랜드 사용 등 사업 추진
- 실행단계('11년 이후) : 통합 시험인증기관의 비영리 법인화 추진

| 기술표준 2009.1